

공정거래위 카르텔 정비방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법률 및 판매카르텔 관련 조항을 98년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카르텔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 농축임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카르텔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그동안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해온 국내 59개 법률 72개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

및 판매카르텔 관련 조항을 98년 10월까지 모두 폐지토록 요구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비 대상으로 밝힌 농업관련 제도는 농·축·임업등 협동조합의 공동 구매사업과 공동 판매사업, 생산자단체의 출하 약정사업 등으로 이들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

통해 이윤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카르텔과는 달리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협동을 통해 개별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를 담합차원에서 막으려는 것은 협동조합을 폐지시키려는 조치와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부나 생산자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출하 조정사업도 기업활동에서처럼 담합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과잉생산 등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값파동 등을 방지, 농가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를 불공정거래나 담합으

로 보고 있는게 대부분이라며 이들 법과 제도의 현실적인 피해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은채 정비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주 전국대 자연대학장은 「기업의 독점행위를 금지, 공정 한 경쟁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업과 농민·협동조합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경제적 약자의 협동행위는 헌법에 서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를 담합행위로 보고 규제하려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수출차 노린 위장·편법수입 재경원, 대책마련에 나서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체제 발효이후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율을, 가공농산물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역관세구조」가 시행되면서 과도한 관세차에 따른 마진을 노린 편법·위장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율이 2백60%인 고구마 전분을 그대로 수입하지 않고 빵가루를 일부 섞어 고구마전분 조제품(세율 8%)으로 위장수입하는가 하면 메밀가루(관세율 8백62.5%)를 국수(8%)형태로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추다대기(8%)를 수입한 뒤 물기등을 제거해 고춧가루로 국내에서 판매, 결과적으로 고춧가루 관세율(2백91%)을 회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통상마찰도 야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원료제품에 대한 높은 세율을 면하기 위해 특별주문한 혼합물품을 조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자 외국에서 품목분류변경에 의한 수입억제 조치라고 문제삼고 있다. 갑자기 관련된 통상마찰 건수만도 미국이 3건, 네덜란드가 1건에

달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천연상태 농산물의 관세율을 내리면서 가공품의 세율을 올려 수출격차를 줄일 방침이라 한다.

한편, 천연꿀의 경우 올해 관세율은 261.9%, 벌꿀조제품은 8%로서 95년 6월 북한산 고려원형꿀(산천연꿀+인삼 한뿌리 침지)을 이같은 케이스로 관세분류를 신청했다가 본회의의 강력한 항의로 불발로 그친게 있어 요주의 감시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부 사업비 1천11억 감축 정부는 올해 재정긴축 방침에 따라 농림부 소관 사업비 1천11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1천7백20억원의 정부예산을 감축키로 했다.

농림부와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농림부와 농업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 올해 농림부 소관 사업비 가운데 농촌경제연구원 청사 신축비 3억원, 총액평선사업비 5백73억원, 장기계속사업비 4백35억원 등 모두 1천11억원의 집행을 유보키로 했다.

농업관련 10개 법률, 10개 제도 포함 파장 커

이 가운데는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농업관련 10개 법안, 10개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법률과 제도를 농림부등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해놓은 상태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위적인 가격통제·생산제한 등의 카르텔을 금지하는 협정을 추진하는데 대비, 국내 법령을 미리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OECD가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이 확정된 뒤인 지난해 11월 한국정부에 가격

이같은 제도가 폐지될 경우 협동조합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자를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이 불가능해져 협동조합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적정 생산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자 농민과 체결하는 생산출하조정사업도 불가능해지고 생산과잉에 따른 값 폭락과 수급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따라 농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비대상에 포함시킨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사업 등 농업관련 제도의 경우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들이 독점을

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법률별로 검토작업에 착수한 단계」라고 밝히고 「아직 검토가 진행중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제도 정비방안에 농업관련 법과 제도를 포함시킨 것은 핵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는 이와관련,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작업에 나서는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대상으로 제기한 농업관련 법과 제도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를

피투(P₂) 신제품 생산판매

하절기 새로운 제조기술에 의해 생산된 P₂ 신제품은 금년봄 생산된 일부 제품의 단점을 완벽한 실험하에 보완시킴으로서 가시응애 및 꿀벌진드기를 100%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제품입니다. 가시응애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봉군은 P₂스트립의 교환시기를 10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처리하십시오

- ① 탁월한 효과와 저렴한 가격
- ② 편리한 사용법
- ③ 소상 전면에 부착하므로 소비 취급에 편리
- ④ 1회 사용으로 장기간의 방제효과 지속
- ⑤ 꿀벌과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

가시응애 및 꿀벌진드기의 시작과 마지막 구제시기인 2월부터 11월은 금년과 내년도까지 양봉사업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시응애 피해, P₂로 해방될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품 제조원

(주) 대성미생물연구소
(주) 한 동
(주) 중앙케미칼

판매원(전국총판) ... 한국 유일의 봉기구 전문 생산업체

고려양봉원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35-16
☎ 053-424-8252 · 5040, FAX 053-425-1310

은행 온라인구좌번호
(예금주:고상인)
● 농협 703-01-004324
● 우체국 700039-0106059
● 국민은행 601-01-0018-266